

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

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

○ 이정현 의원(광주광역시연합회 회장 겸임), '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' 대표발의

-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 의원(광산1, 산업건설위원회, 광주광역시연합회 회장 겸임)은 6월 9일 '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'를 대표발의했다.
- 이 조례는 '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등을 기초해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은 물론,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.
- 이정현 의원은 "그동안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은 대부분 농업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,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"며 "한층 업그레이드된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"고 밝혔다.
- 아울러 "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민의 귀농·귀촌까지 지원하고 있지만, 정작 농업·농촌과 고락을 함께해온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답보상태다"며 "농업경영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,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"고 말했다.
-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. 또한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,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·운영 등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이 포함됐다.

○ 제주시연합회-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정책 간담회 가저

- 제주시연합회(회장 현진성)는, 6월 13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'아라올래'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(위원장 강창일)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.
- 이날 간담회에서는 △농가부채 △정책보조금 품목별 편중 △자유무역협정(FTA)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△반복되는 과잉생산 및 소비부진 등 1차산업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논의가 집중됐다.
- 현진성 제주시연합회장은 "농업정책은 모든 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"며 "농업이 지원금·보조금에 의존하는 산업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"고 제안했다.
- 강창일 도당위원장은 "정부가 2017년까지 기한으로 만들어진 FTA기금을 더 이상 확보하려 하지 않는 등 1차산업 홀대가 지나치다"며 "FTA로 농업의 자립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농가에 자립하라고만 하면 안된다"고 꼬집었다.
-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은 "현재 제주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보조금 규모가 적지 않지만 골고루

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"며 "보조금이 특정품목에 편중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- 아울러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는 농업 융자정책과 관련, "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농업융자는 3%대를 고수하고 있다"며 "제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피력했다.

○ 괴산군연합회, 괴산엑스포용 땅콩 심어

- 오는 9월 개최되는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농사 체험장이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. 괴산군연합회(회장 김흥수) 소속 회원들은 6월 6일 괴산을 사창리 소재 밭 2,700평에 땅콩을 심었다. 이날 심어진 땅콩은 엑스포 행사기간중 관광객들에게 공개돼 땅콩캐기 체험용으로 활용된다.
- 괴산군연합회는 이에 앞서 고구마 3천평, 고추 600평도 체험용으로 조성했다. 대학찰옥수수로 유명한 괴산군의 특성을 감안 1천평의 옥수수밭도 곧 조성한다. 또 1만 5천평 규모의 메밀도 심어 관광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. 유기농엑스포 체험장은 관광객들이 직접 농사체험을 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일체의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유기농법으로 관리된다.
- 김흥수 회장은 "괴산유기농산업 엑스포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법으로 관리된 농산물을 직접 보고 수확하면서 유기농의 가치를 알자는 것"이라며 "유기농 농사 체험은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 것"이라고 말했다.

지방 농정 소식

○ "소규모 농어촌 학교 죽이나" 학교 통폐합 장려책 논란

- 정부는 5월 13일 '2015 국가재정전략회의'에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.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.
- 이같은 정부 방침이 나오자 지방교육계는 '농어촌학교 죽이기'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.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.
- 현재 정부가 전국 시·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은 약 10조원으로, 배분 기준은 학교 수 50%, 학생 수 31% 정도다.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학생 수 비중이 올라가면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.
- 일례로 강원도의 경우 정부 안대로 개편될 경우, 현행 총액 대비 4.7%의 교부율이 3.2%로 줄게 되고, 이에 따라 교부금은 현재 1조 8,014억원에서 1조 2,166억원으로 5,84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